

‘임을 위한 행진곡’ 온 국민이 제창... 이제 차대통령이 결단해야

보훈처 ‘꿈수’에 국가 기념식 파행 우려

5월 단체·시민사회단체 ‘농성’ ‘보이콧’ 5·18 왜곡 방조 ... 국민 여론 갈등·분열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를 놓고 또 다시 파행이 우려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하지 않고, 합창단의 공연 방식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5월 단체와 광주·전남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기념식 보이콧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결단해야”=광주시와 5·18 관련단체 등 310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기념곡 추진대책위원회’는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당연히 기념행사의 공식식순에 포함해 합창이 아니라 참석자가 제창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강운태 시장, 장희국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5·18 관련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에 당연히 오실 것으로 믿고 크게 환영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제33주년 기념행사가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민 대통합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에서는 보훈처가 여론 흐름을 살펴가면서 갈등과 분열을 방조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처사는 반역사적 세력의 5·18 왜곡을 지지하고 방조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5·18 단체의 한 관계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은 노래 한 곡을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보훈처는 파행을 유도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즐기는 것으로도 비쳐 신뢰를 잃었으니 청와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성” ‘보이콧’ 기념식 파행 우려=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와 관련 3단체(5·18구속부상자회·부상자회·유족회)의 단체장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무산됨에 따라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광주진보연대와 전남진보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50여 명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 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식 제창 공식화와 공식 기념곡 지정, 박승준 보훈처장 사퇴 등을 촉구하는 무기한 전략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행태는 5·18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퇴출시키겠다는 의도”라며 “5·18 역사 왜곡과 폄하를 정부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자행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5·18 기념재단과 광주진보연대, 5월 단체는 국립 5·18 묘지 앞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으며, 기념식 당일에도 농성과 침묵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명운동은 행사에 참여한 광주 60여개 단체, 전국 6대 권역별 기념행사 추진협의회, 전남 12개 시·군 행사위, 독일·일본·미국 등 해외 행사위에서 동시에 시작할 예정이다.

이처럼 행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5월 당사자들의 기념식 불참, 기념식 당일 농성 등이 예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해 치러지는 5·18 행사가 반쪽짜리 기념식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03년 정부 공식행사로 지정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첫 파행은 지난 2010년 30주년 기념식에서 일어났다.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배제하면서 5월 단체와 유족들이 기념식에 불참하고, 망월동 구 묘역에서 별도의 기념행사를 치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임을 위한 몸싸움’ 국가보훈처가 지난 15일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데 반발한 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은 16일 오전부터 5·18 국립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한 때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합창’ ‘제창’ ... 작지만 큰 차이

제창엔 VIP에 초점

5·18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의 합창(合唱)과 제창(齊唱)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전적 의미의 합창은 여러 사람이 서로 화성을 이루면서 다른 선율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제창은 여러 사람이 같이 큰 소리로 동시에 노래를 하는 것이다.

일핏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공식행사 때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는 것이고, 제창은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물론 합창단이 부를 때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불러도 무방하다.

그러나 행사에 참석한 VIP 입장에서 합창과 제창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합창을 할 땐 영상 카메라가 합창단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제창을 하면 VIP를 포함한 참석자들을 비추

게 된다. 따라서 5·18 민주화운동이 전국에 TV를 통해 생중계되는데 제창하게 되면 VIP 모습이 전파를 타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한다면 박 대통령의 ‘입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것이다.

2004년 5·18 기념식 때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악보를 보지 않고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족들과 합창하는 모습이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서 기념식에 참석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될 때 악보 또는 식순표로 추정되는 종이를 보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지만 따라 부르는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제창 문제를 논의하는 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하라”

5·18서울기념사업회·민변 등
서울시에 지방세도 체납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사태의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정금 공소 시효가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와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광주일보 7일 자 1·3면)과 관련,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0여개 시민단체는 16일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을 환수하고 경호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 전 대통령은 역사와 국민 앞에 스스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그의 불법 은폐재산 환수를 위해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3년 이상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942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고 전 전 대통령도 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았고 현재 가산금이 붙어 체납액이 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그는 2205억원 추징을

선고받고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1672억원을 미납한 채 최근 1000만원 이상의 육사발전기금을 내고 호화골프를 즐기는 등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1년간 그에 대한 경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5·18유공자에 대한 평생 보상비 평균인 5200만원의 13배인 7억여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 전 대통령은 역사와 국민 앞에 스스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그의 불법 은폐재산 환수를 위해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3년 이상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942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고 전 전 대통령도 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았고 현재 가산금이 붙어 체납액이 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그는 2205억원 추징을

빛의 만평

- 김중두



당최 국민전환이 안된다

청와대마저 ‘모르쇠’

김행 “보훈처에 물어보라”

제33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로 ‘반쪽 행사’로 치러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청와대가 방관자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광주일보 통화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보훈처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니가 보훈처에 물어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청와대에서 답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청와대의 입장이 없다는 거냐”는 질문에 “모든 사안을 어떻게 청와대가 일일이 답할 수 있느냐”며 “해당 부처의 일은 부처에서 답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울시립교향악단

현대자동차와 함께 하는 정명훈과 서울시향의 H-Premium Concert

베토벤, 교향곡 5번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바이올린_클라라 주미 강)

2013. 5. 19(일) 오후 4시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협찬 현대자동차 주관 stage one

티켓 VIP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02)780-5054 예매 인터파크 1544-1555